

文대통령 백신 '허위사실유포' 네티즌 처벌 수위는?

방역당국, 엄정 대응 예고...경찰 수사 의뢰

공무집행 방해 확정 시 5년 이하 1000만원

허위신고·사실유포 등 실형...메르스 전례도

간호사 비방엔 협박죄·강요죄 성립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불거진 '주사가 바뀌지 않' 논란에 대해 방역 당국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를 바꿔치기해 접종했다'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접종 담당 간호사가 캡이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았다가 가림막 뒤로 이동했다 나온 뒤 주사기에 캡이 닫혀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사기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선 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것이라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접종 과정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당국의 공무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 만큼 엄정 대응하겠

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31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방역에 혼란을 준 이대수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5월 학부모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며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역시 같은 형을 확정했다.

허위 신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B씨 2015년 6월 전북도청 보건 의료과에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에 다녀온 뒤 기침 증상이 있다며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보건소는 B씨에게 방문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4시간 만에 B씨의 행방을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신고 내용은 모두 가짜였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처벌 및 보호관찰을 모면할 생각에 이 같은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선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명예훼손죄는 제 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문 대통령과 간호사 당사자의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네티즌들이 문 대통령에게 접종한 간호사를 상대로 양심선언을 종용하거나 이를 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강요 및 협박죄에 대한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형법 제283조(협박)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익슬기자

광양소방,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컨설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최원경)는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현지 지도 점검 및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 컨설팅은 봄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숙박시설을 방문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및 초기대응능력 강화로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원 및 사용법 교육 ▲비상구 및 피난시설 폐쇄·잠금행위 금지 지도 ▲소방시설 잠금·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 금지 지도 ▲통로 등 계단 내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금지 지도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사용 당부 등이다.

광양=심종섭기자

완도해경, 제241기 신입경찰관 24명 실무능력향상첫걸음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2일부터 15주에 걸쳐 241기 신입해양경찰관 순경 24명(남 24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관서 실습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4명의 신입경찰관은 신입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각 부서에 배치되어 경찰서와 파출소·합정을 15주 동안 현장실습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실습내용은 ▲파출소에서 현장업무와 각종 시스템 교육 ▲경비함정에서의 직무 분야별 합정교육 ▲경찰서에서 부서별 업무담당자를 통한 주요 업무 파악과 담당 멘토를 지정하여 교육생들에게 지식 등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편성되었다.

완도=이민혁기자

무안소방, 한국119청소년단 신규 단원 모집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이번달 31일까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지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119청소년단을 모집한다.

한국119청소년단은 1963년 창단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이다.

모집대상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모집 인원은 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별 단원 및 지도 교사로 모집한다.

한국119청소년단으로 활동하면 안전체험활동, 화재예방 캠페인, 안전문화탐방행사, 생활안전 관련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등은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061-450-0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1980년 광주가 2021년 미얀마를 응원합니다”

내일 5·18민주광장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집회



광주 각계각층이 군부의 폭압에 의롭게 맞서다 희생당한 미얀마인들을 추모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41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광주시민들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3월 27일은 미얀마가 일본 식민지 시절 일제에 대해 범국민적인 저항

이 시작된 날이다. 군사 정부가 이를 '군의 날'로 변경했으나 미얀마 국민은 '저항의 날'로 부르고 있다.

광주연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집회 참석자를 99명으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을 거쳐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전 등록한 시민만 참여할 수 있다.

광주연대는 집회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도 벌인다.

권력 장악을 위해 자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미얀마가 민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조치도 촉구한다.

김민정기자

담양소방, 축산농가 종합예방대책 마련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3년간 약 150건에 달하는 축사화재 발생으로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축사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50% 비율로 가장 높고,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30%로 두 번째로 많다. 또한 봄철 축사화재는 건조한 대기로 인해 25%나 된다고 말했다.

축사시설은 노후된 전기시설 사용과,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냉·난방기 등 과부하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아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담양소방서에서는 대형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으로 △대형축사 대상 관서장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화재사례, 안전문자 등 관계자와 양방향 소통 장구 마련 △언론 홍보를 통한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령 전파 △대형 축사 관리카드 정비 등을 추진한다.

담양=박종영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